

공적 보도자료와 오보 :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박영상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I. 서론

뉴스를 정의한다는 것은 단순한 작업은 아니다. 뉴스는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는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논의 되기도 하고 그날그날의 일기라고 얘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뉴스는 언론기관이 만들어 내는 메시지이고 또 언론기관의 활동 결과를 응축한 것이기 때문에 뉴스는 언론기관이 만든 생산품이라고 보는 것이 무난할 듯하다.

뉴스를 언론기관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뉴스 속에는 언론기관의 의도가 배어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셈이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뉴스는 단순한 반영물은 아니고 재구성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구성의 과정이나 의도에 따라 실재하는 사실이 복제될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결과를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뉴스는 언론기관의 질이나 행동양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쓰여 지고 있다

뉴스가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건 뉴스의 질은 사실성의 확충정도로 가늠되게 마련이다. 뉴스 의 원자재가 사회현상이나 사건에서 추출되기 때문이다. 또 뉴스의 존재 이유가 수용자에게 「일어난 것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널리즘은 정확성을 뉴스 규범 중 첫번째 덕목으로 꼽고 있다. 뉴스를 얘기할 때마다 후렴처럼 따라다니는 객관성이나 불편 부당성 등은 사실 정확성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에서 논의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뉴스거리를 취재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언론인이 사회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지닐 수는 없다. 또 모든 현상을 직 접 관찰하고 뉴스를 작성 한다고 해도 인간 능력의 제한성 때문에 그대로 알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 일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믿을 수 있는 「소스」에 의지하거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사는 제공된 자료나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검증절차나 확인과정을 거치든지 필요한 부분은 참고자료나 보충 취재를 통하여 완성도를 높이게 마련이다. 따라서 뉴스의 제작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뉴스는 처음부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잘못된 정보나 제보가 뉴스 제작의 시발점이 될 경우를 지적할 수 있다. 더구나 제공된 정보에 어떤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든지 제공된 사안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뉴스는 사실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작성될 수밖에 없다. 또 마감시간의 압력이나 속보성에 집착하다 보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게 되고 따라서 사실성은 훼손되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언론인이 사건을 전형화 시킨다거나 일상적인 틀 속에서 해석 한다면 사건은 일그러져 보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때문에 언론기관은 나름대로 정확하고 완전한 기사를 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보도를 줄이기 위해 객관성이라는 포괄적이고 규범적인 목표나 원칙을 설정하고 사실에 가까운 보도를 하도록 담금질을 계속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 이 공식 적으로 실현되는 과정 중 하나가 기사자료 출처를 엄격 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누구나 언론기관에 기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언론기관은 어떤 곳으로부터도 기사자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제공된 기사자료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확인, 검증된 후 기사로 작성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뉴스 소스의 신뢰도와 기사로 채택될 가능성은 정비례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관이나 인물은 사회적인 관심사가 된다는 관행 때문이다. 뉴스가치 판단 기준 중 유명인사나 공식기관은 뉴스를 만든다는 저명성의 연장선상에서 뉴스소스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또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인물이 제공한 자료는 나름대로 검증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회적인 동의 속에서 수용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공공 기관이나 공인, 예를 들어 정부의 고위 관계자, 사회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인물, 정부 당국 등의 공식적인 발표나 언명은 확인된 사실로서 간주하여 뉴스작성의 기본으로 삼아 온 것이 지난 1 백 여년동안 저널리즘의 관행이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소스」가 제공한 자료에 충실하게 기사를 작성하고 기사에 다소의 잘못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면죄부」가 주어져 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잘못된 보도의 귀책사유를 엄격 하게 규정 해 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뉴스의 취재 관행이나 과정이 어떠하건 일반 수용자는 그 뉴스가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에 충실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사회의 반영」로서 뉴스를 수용하기 때문에 뉴스를 전하는 언론기관이 완전한 생산품을 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나아가 어떤 경우이건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기관이 피해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고 호응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사의 완전성이나 사실성의 기준을 「사실에 충실한」것 보다는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셈이다. 형식이나 관행보다는 본질적인 면에서 뉴스의 질이 논의되고 있고 동시에 언론기관의 편집(성)권 행사 못지 않게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 형식논리로 본다면 기사가 사실의 반영이고 따라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보도되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언론기관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얘기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진실에 언론인이 접근할 수 있느냐 혹은 완전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느냐를 따진다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저널리즘의 관행이나 행위양식을 대입시키면 더더욱 그렇다.

이 글은 「잘못된 보도」의 안팎을 조명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지금까지 「믿을 수 있는 소스」로 인정되어 온 공공기관이나 공인의 공식적인 발표로 발생한 오보의 원인과 결과를 살피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또 뉴스가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취재방식을 택할 수 있느냐를 과녁으로 삼고 있다.

II. 진실의 수준과 뉴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진실해야 한다는 명제에 무조건 동의하고 있다. 또 이 명제로부터 객관성이나 사실성 등이 논의되고 기사의 질이 가늠되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기관의 보도가 사실이나 사건 자체일 수는 없다. 일반 의미론에서 얘기하듯이 언어로 표현된 사실은 사실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The map is not the territory itself, 또 아무리 훌륭한 기사라고 해도 그것은 압축되거나 단편을 알리는 과정이지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저널리즘에서 현실 그대로의 사실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에서도 논급했지만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의 사시, 정책, 사회적인 압력, 가치관등에 의해서 편향되거나 왜곡되거나 선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널리즘과 관련된 진실(사실)의 수준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초월적인 진실을(transcendental truth)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갖추어졌고 왜곡이나 편견이 없는 순수한 진실을 말한다. 인간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언제나 진실인 것이 초월적인 진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널리즘은 이 수준의 진실에 도달할 수는 없다. 다만 언론은 초월적인 진실의 편린만을 취급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절대가치를 지닌 진리를 알아내고 이를 보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을 알리는 보도와 이 수준의 진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수준의 진실은 잠재적인 진실(potential truth)을 지적 할 수 있다. 잠재적인 진실에는 언론매체가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언론인은 투철한 직업의식과 냉정한 판단력 그리고 예리한 통찰력을 지녔을 때 잠재적인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확인과 검증의 절차를 거쳤을 때 그 모습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잠재적인 진실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며 발견의 정도는 언론의 노력의 결과와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진실을 발견하려는 언론인은 더 많은 진실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복잡한 사안에 대한 의미 파악이나 미묘한 사건의 모드를 찾아내려는 노력은 잠재 적 인 진실을 현시적인 것으로 바꾸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

세번째는 선택된 진실(Selected truth)을 지적 할 수 있다. 즉 언론이 보도하는 기사의 내용이 실제의 사실과 얼마나 합치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언론이 잠재적인 진실을 모두 기사에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면이나 시간의 제약은 물론 언론인 나름대로의 뉴스 가치 판단에 따라 진실이 재단되고 정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인이 진실이라고 취재한 것 중 일부가 기사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선택된 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뉴스보도에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뉴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수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다.

네번째는 보도된 진실(reported truth)을 얘기 할 수 있다. 선택된 진실 모두가 보도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여과장치를 통하여 첨삭 내지, 크기, 위치의 조절 등 편집(성)과정을 통해 기사가 등급화되게 마련이다. 보도된 진실은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부분이다.

보도된 진실의 단계에서 뉴스의 절이나 진실성의 정도가 판단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보도된 진실은 언론과 수용자를 잇는 징검다리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지된 진실(perceived truth)을 얘기 할 수 있다. 인지된 진실은 보도된 진실을 수용자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한다. 이 수준에는 언론인이 개입할 수 없다. 보도된 진실을 수용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감지하며 받아들이냐는 전적으로 수용자의 특성과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는 같은 기사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엉뚱하게 인식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뉴스의 진실성은 언론인 속에 존재할 수도 있고 수용자 속에도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언론인이 진실이라고 판단한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수용자의 세계는 제공된 기사를 축으로 형성되고 따라서 사실 인식의 틈새가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취재보도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진실성의 의미는 미묘하고 중층적이며 심지어 불분명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인식론에서 접근하는 진실성, 규범론에서 논의 될 수 있는 진실성, 저널리즘 현실에서 본 진실성의 강조점과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에서 진실성이 윤리 규범으로 혹은 행동 강령으로 나뉘어서 얘기되는 이유는 진실성의 외연과 내포가 이처럼 다양한 때문이다.

Walter Lippmann 은 「진실 발견을 겨냥한 명백하고 분명한 기준을 제공하는 징검다리」로서 뉴스를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진실을 찾아내려는 방법은 각 직종마다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법부의 경우 분명한 증거를 통하여 진실을 찾아내려 한다. 학계는 이론을 발견하기 위해 조사활동을 벌이거나 관련 문헌을 제시하기도 한다. 의료계는 환자의 증상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맞추어 나아가는 방법으로 진실(상)을 찾아 나아가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전문직들은 나름대로 진실발견을 위한 분명한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검증방법도 개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저널리즘은 진실 발견이나 검증을 위한 명백한 도구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윤리 규범이나 윤리 강령에서 진실을 강조하거나 기사작성 과정에서 사실보도를 위한 여과장치가 있을 뿐이다. 사실을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명제에는 누구나 동의를 하지만 어떤 것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는 주관적인 판단과 심미적인 안목이 어우러져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보도는 「취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실」(best obtainable fact principle)에 충실하도록 못박고 있다. 동시에 취재된 사실 중 입증가능한 것(verifiable fact)만으로 기사를 쓰도록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입증 가능한 최대한의 사실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 한다면 사실보도나 객관보도라고 인정 한다는 것이 전래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최대한의 사실을 수집하거나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이나 공인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소스로서 혹은 전문가로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Herbert Gans 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뉴스 소스의 권위나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자료가 뉴스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실이 언론기관에 의하여 입증되기보다는 공공기관이나 공인에 의해서 입증되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공인이라고 해서 진실만을 제공하고 사실만을 얘기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공공기관이나 공인이라고 꼭 국민편에서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어떤 방향으로 국민을 동원하거나 자기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특정 사안을 채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본다면 공공기관이 제공한 「보도자료(Press release)」는 말 그대로 자료일 뿐이다. 언론사가 이를 원자재로 확인이나 검증과정을 거쳐야 기사로서 제시될 수 있다.

III. 공공 뉴스 소스와 미디어

진부한 표현 이지만 언론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능하고 있고 이런 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보도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보도활동의 궁극적인 도착점은 국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론에서 「사실성」이나 「진실성」이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 일단 국민 모두를 위한 사실성이라는 명제때문에 소스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사실에 충실한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스로부터 기사거리를 취재하되 독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소스가 제공한 자료를 국민의 편에서 검증하고 확인하고 국민을 위해 작성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는 미디어의 뉴스 소스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향력이 크거나 공인된 기관인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와 공공 뉴스 소스는 쉽게 공생관계를 형성하거나 나아가서는 미디어가 뉴스 소스에 동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언론이 뉴스 소스에 동화된다는 것은 뉴스 소스에 의한 기사조작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언론이 스스로 인정하는 뉴스 소스에는 늘 열려 있게 되고 그들이 제공한 보도자료나 참고 자료는 그대로 기사에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기사 하나하나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 판단은 뒤로 밀리고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는 자동적으로 기사화되는 일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일상화가 착근되면 사실화인 절차는 생략되거나 소홀하게 취급되어 특정 기관의 보도자료는 「무조건」 기사가 된다는 등식이 성립되게 마련이다. 기사의 생명인 사실성의 확인이나 증폭이라는 점검장치는 증발하게 된다. 이것은 뉴스가 언론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뉴스 소스에 의해서 조정되거나 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전형화의 단계(stereotyping, patternization)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갈등적인 요소나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사안, 평가나 분석이 필요한 사태에 대한 기사를, 제공된 자료만을 가지고 작성한다면 전형화의 정도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또 뉴스 소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결과를 몰고 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뉴스 소스에 접근이 제한될 경우 이런 현상이 더 첨예화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91년 「걸프 전쟁」의 경우 미디어의 전장 밀착 취재는 안전을 이유로 통제되었고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보도자료가 일방적으로 제공되었다. 언론인들은 사실화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채 미군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걸프전을 전 세계에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참 모습보다는 미국의 승리라는 낭만적인 모습만 부각되기도 했었다. 또 지난 84년 미국이 UNESCO를 탈퇴할 때도 미국 정부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공되었고 미디어는 그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뉴스가 사실을 반영하기 보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한 꼴이 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국가 기밀이나 국가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다루는 기관의 경우 기사자료의 배포는 일방적이고 선택적인 것이 보통이다. 또 사실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충 취재를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예를 들어 청와대, 감사원, 국가안전기획부 그리고 국방부등은 미묘한 사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언론인의 자유스러운 취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일방적인 발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줄 뿐이다. 따라서 언론은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나 대변인들을 통해서 기사거리를 수집하고 기사를 작성 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고 해도 잘못된 보도의 책임을 뉴스 소스에 미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뉴스는 언론 기관이 사실이라고 수용자에게 제시한 최종 산물이기 때문이다. 최종 산물로 제시하기 전에 언론이 모든 확인,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이고 요청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한 뉴스보도 피해보상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감사원은 한국통신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조백제 당시 한국통신 사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했고 방만하게 경영을 해 왔기 때문에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신문이나 방송은 관례대로 감사원의 발표에 충실한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조백제 씨는 감사원의 지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언론중재신청을 냈었다.

대부분의 신문이나 방송은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이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경우 감사원의 발표나 조백제 씨의 반박 중 어느 것이 사실이나를 언론이 판단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취급하고 나머지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면 언론은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또 제작 여건상 한쪽의 주장만을 보도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반대편의 주장이나 해명의 기회를 준다면 언론의 책무는 성실하게 이행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한 신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문이 감사원의 발표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조씨의 반박에 대해서는 별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또 하나의 예는 지난해 10월에 일어난 『친북혐의 교수 2명 연행』의 제목으로 보도됐던 사건을 들 수 있다. 모든 언론 매체들의 보도내용은 국가안전기획부가 긴급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2명의 교수를 연행, 국가보안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혐의내용 중 중요한 것은 북한 방문 여부, 북한으로부터 금품수수 여부 그리고 간첩활동을 했는지 여부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안기부에서 보도된 혐의 내용에 관한 조사를 받은 일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정보도 신청을 냈었고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은 정정기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맺었다.

이 경우 신문이나 방송들은 안기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지만 핵심 사실에 대한 확인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문과 방송은 공안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안기부의 권위 그리고 안기부가 발표해 온 관행에 따라 확인, 검증의 절차를 무시하고 기사를 작성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물론 안기부 취재는 소스 접근이 자유롭지 않아 확인이나 보충 취재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안기부 취재보도에 있어서 일상화, 전형화 그리고 등식화의 관행이 사실확인 작업보다 일반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두 경우 잘못된 보도가 일어나게 된 언저리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언론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나 안기부는 특정 분야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발표가 모두 진실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식적인 발표도 일만 기사화하기 이전에 확인,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신문과 방송은 공공기관에 대한 맹신주의로 거쳐야 할 여과장치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신문이나 방송들은 사건 하나 하나에 대한 뉴스가치를 측정하기보다는 상황논리나 분위기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평가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는 등 충실한 사실 전달에 미흡함을 보였다. 조백제 사장의 경우 사건 당시 노사문제가, 교수 연행 당시에는 박홍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사는 어떤 과녁을 정하고 이를 증폭시킴으로써 전형화나 일상화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문과 방송은 두 사건을 피상적으로 혹은 현상적으로 다루거나 인물이나 계층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본질보다는 주변을 강조했고 따라서 사실전달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사실성(factuality), 정확성(accuracy), 그리고 완전성 (completeness)은 뉴스의 정보적인 가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중요도나 우열은 명확하게 가릴 수 없을 만큼 연결되어 있다. 또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 합의된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안별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뉴스 속에 표현되었거나 재구성된 현실이 실제의 사실과 얼마나 합치하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쓰여질 뿐이다.

뉴스의 질을 체계 적으로 그리고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하나하나의 뉴스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뉴스 속에 스며있는 사실적인 표현과 사실과의 대응 관계를 꼼꼼하게 따지기도 한다. 혹은 일시적으로 뉴스 속에 표현된 어휘, 문장, 문맥이 사실성 증폭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검증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저널리즘은 과학적인 방법이나 분석적인 접근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다. 저널리즘은 창조적인 면도 지니고 있고 기술적인 국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사실보도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한 세기여 동안 저널리즘은 검증된 사실을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하게 제시한다는 객관성을 취재현장에 착근시키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다. 저널리즘에서의 객관성은 단순히 사실을 수평 이동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과 의견을 분리 시키고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며 저널리즘에 맡겨진 책임과 책무를 다한다는 윤리적인 함의도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잘못된 보도」는 기사의 외형적인 면(객관적인 오보)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면(주관적인 오보)이 객관성 원칙에서 일괄했거나 객관성을 훼손시킨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잘못된 보도가 일어나게 된 동기나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뉴스 소스 특히 믿을 수 있는 소스라고 인정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맹신이나 의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언론인의 전문성 결여, 마감 시간의 압력, 사회의 분위기, 이데올로기나 문화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외에도 언론 매체간의 경쟁, 상업주의에 뿌리를 둔 선정성, 외부 기관의 압력 등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기사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나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할 때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공기관이나 공인이 제공하는 자료를 엄격하게 다룰 때 오보의 양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등 소위 믿을 수 있는 소스가 제공한 자료는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재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확인 과정은 사실과의 대응 정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소스를 동원하여 사실을 규명해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double-check principle). 또 기사 구성이 사실을 충분히 전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취재과정의 타당성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뉴스 소스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기사 자료의 제공이 국민 모두를 위한 「최대 공약수적」인 정보인지, 그리고 공리적인 입장에서 기사가 취재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validity check).

기사 거리에 대한 확인만으로 잘못된 보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사의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기사에 쓰여진 표현은 의미가 분명하고 평가적인 어휘의 사용은 억제되어야 한다. 또 언론인 스스로가 사건에 대해서 예단을 하거나 파당적인 관점에서 기사를 작성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일어난 것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균형성이 기사 작성의 출발이고 도착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alance norm).

하지만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보도는 일어나게 마련이다. 잘못된 보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Horace Greeley 가 말한 「글자 한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라도 의심이 나면 확인이 될 때까지 보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라는 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뉴스를 만드는 당사자들이 뉴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실무에서 실현해 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참고문헌

1. 한국언론연구원(1990), 오보와 정정, 한국언론연구원
2. Dennis, E. (1992), Of Media and People, London : Sage
3. McQuail, Denis (1992), Media Performance, Newbury, Calif : Sage
4. Tankard, J W. et al.(1974), 『News Source Perceptions of Accuracy of Science

Coverage,』 Journalism Quarterly 51 : 219~225

5. Tunstall, J. (1971), Journalist at Work. London : Constable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미주리대(신문학 박사), 합동통신, 한양대 사회대학장
- 저서 : 「뉴스란 무엇인가」, 「언론과 철학」, 「과학보도의 원칙과 규범」 외
- 현재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